KNSI 특별기획 제20-3호

2008 한일관계 분석과 과제

이기호

(성공회대 연구교수/ 노틸러스@서울소장)

이명박정부 이후 한일관계가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대북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이고 중국이 구상하는 아시아질서와는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개입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인지 향후 한일관계에서 주목해볼 대목이다.

Ⅰ.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의 새정부 출범에 잔뜩 기대를 거는 눈치다. 가토코이치(전 자민당 간사장) 및 센고쿠요시토(전민주당 정조회장) 등 일본의 초당파 의원들이 얼마 전 방한했을 때, 이명박 당시 당선인이 '역사적인 문제로 (일본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 보다는 일본과 성숙한 관계가 되려 한다' 는 언급은 일본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노무현정부에서 급랭되었던 한일관계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기대는 2월 22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 25일 양국정상회담에서 한일간 FTA 협상재개에 합의할 것이라는 보도를 냈고 한국외교통상부는 이것이 오보임을 즉각 해명하기도 했다.

2월 25일 취임식 직후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은 포괄적인 협력에 대한 구상을 논의하였다. 첫째, 이른바 정상간 '셔틀외교' 를 재개하기로 하고 이대통령이 4월에 일본을, 가을에는 후쿠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등 올해 일정을 잡았다. 게다가 올 7월에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G8정상회담에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초대될 가능성도 있어 정상간 외교는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

둘째, 양국 간 투자활성화와 경제협력강화를 다짐하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에 준하는 재계의

협력기구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통상부가 비록 FTA협상 재개는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지난 1월 29일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이 연세대에서 행한 강연에서는 '한일FTA 협상 재개를 검토하고 한중FTA 공동연구를 종결해 한중일간에 FTA의 토대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고 언급한 것을 감안한다면 한일간에 FTA협상도 곧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청소년문화교류 활성화를 언급한 만큼, 한일간에 이미 활성화되어있는 문화교류 및 차세대 교류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공조가 다루어졌다고 한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남북 간 정상회담을 사실상 제안하였고, 대선공약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핵 포기와 개방을 조건으로 북한을 10년 안에 3천불소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다시 명시하였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제 한국과 일본은 명실공히 동맹국가로 자리를 잡고 모든 분야에서 자주 만나 우의를 다지는 기틀 위에 실질적인 협력을 가시화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는 이를 미래지향적 사고를 하고 윈윈게임을 하자는 원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을 한일관계에 변수로 대입하면 좀 더 복잡한 산수를 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Ⅱ.

먼저 파트너로서 후쿠다정권을 살펴보자. 후쿠다정권의 등장은 작년 7월 참의원선거의 패배와 리더쉽의 부재 그리고 국정혼란의 책임 등으로 아베총리가 전격사임을 함으로써 탄생한 정권이다. 엄밀히 말하면 과도기 관리형 책임자로 등장한 셈이다. 그리고 좀 더 거칠게 보자면 후쿠다 총리의 등장은 자민당의 자구책이기도 하다. 자민당의 입장에서 볼 때, 후쿠다 총리는 고이즈미총리와 아베총리를 거치면서 불거진 대내외 문제를 잠재우기에 가장 적합한 구원투수로 선택된 것이다.

국내정치의 맥락에서 보자면 후쿠다 총리는 총리후보가 되기 전 자민당 내의 총재선거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9개 파벌 가운데 경쟁자였던 아소다로 간사장의 파벌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파벌의 지지를 받을 만큼 조정능력과 치우치지 않은 균형자로서의 입지를 인정받았다. 실제로 후쿠다 총리는 그의 부친인 후쿠다 다케오가 주도한 청화회(淸和會)의 전신인 현재 자민당 내의 최대파벌인 마치무라파에 속해있다. 여기에는 전 모리총리가 배후에 있다. 물론 친 아베그룹과 고이즈미 전 총리 추종그룹이 별도로 있다고는 하나 계보로 보면 마치무라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후쿠다정권은 아베의 실각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주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베에서 후쿠다로 인물이 바뀌었다고 정권의 성격이 바뀌지 않았다. 이미 후쿠다는 모리정권과 고이즈미 정권하에서 1289일이라는 최장수 관방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후쿠다를 구원투수로 삼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따라서 후쿠다 총리의 운신의 폭은 그리 크지 않다. 자민당이 그를 선택한 이유는 대중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쉽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민당 내의 조정과 숨고르기를 버텨줄 수 있는 관리자형 리더쉽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후쿠다를 총리로 내세우고 향후 한일관계를 담당할 자민당 정치의 핵심은 무엇일까. 간단히 답하자면 구조개혁을 내걸고 대중적 지지도는 끌어냈지만 우정국 민영화 등을 통해 자민당의 지지기반을 다 깎아먹은 고이즈미정권과 아름다운 국가를 내걸며 화려하게 등장한 전후세대 최초의 아베정권의 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하되, 우경화의 속도를 늦추고 기존의 요란한 자민당 정치를 국민들의 가시권에서 가리워지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내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문제는 후쿠다 총리가 계승할 수밖에 없는 자민당 정치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핵심은 강한 국가 일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없는 듯 보여 일본 중앙정치의 위험성을 엿보게 한다. 이미 1868년 메이지유신이후 100년만인 1968년 세계 경제 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80년대 이후 줄곧 강조해온 것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정상회담의 참가국이 되었다. 90년대 이후 일본은 군사분야에서도 자위대의 군사력이 미일동맹체제하에서 국제적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 점차 헌법개정의 발판을 마련할 것과 이를 통해 '보통의 군사력'을 보유할 것을 꾸준히 논의해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1년 걸프전을 계기로 일본은 1992년에 「PKO협력법」을 제정하여 이른바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1999년에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미일동맹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하에 「주변사태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리고 2001년 9·11테러 이후 일본은 곧바로 「테러특별조치법」을 성립하여 3차례 연장을 통해 작년 11월까지 일본이 미군의 군사작전에 급유 등의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군사행동을 사실상 지원해왔다. 작년 오자와이치로가 이끄는 민주당이 참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테러특별조치법은 11월에 더 이상 연기되지 않았지만, 올 1월에 자민당이 발의한 「신테러대책특별조치법」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또한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G8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군사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일본은 작년에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격상하기도 하였다. 현재의 방위성 장관은 고이즈미 정권 때 방위청장을 지낸 이시바 시게루가 역임하고 있다. 그는 방위청장관 시절 자위대를 자폐증 환자에 빗대어 자폐대라고 하여 일본 내에서도 비난을 산 바가 있다.

비록 1년 정도의 단명으로 끝난 아베정권이지만 그는 헌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작업을 눈깜작할 사이에 해치웠다. 그중 하나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전통적 가치의 존중을 강조하면서 「교육기본법」을 전후 처음으로 개정한 것이다. 평화를 존중하고 개인의 존엄을 강조하는 내용에서 '국가'를 강조하고 전통을 내세우는 법으로 바꾼 것이다. 이것은 1999년 오부치 총리 때 개정된 일장기와 기미가요를 각각 국기와 국가로 정하는 「국기국가법」의 연장선에 있다. 개인의 존엄과 성장을 위한 교육이 국가를 우선으로 하는 교육으로 바뀐 셈이다.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공모법」 또한 의회에 계류중이긴 하나 자민당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 중의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아베정권이 마련한 헌법개정의 제도적 장치는 「교육기본법」개정과 더불어 이른바 「국민투표법」을 작년 5월에 국회승인을 받는데 성공한 것이다. 「국민투표법」이란 일본국 헌법 개정절차에 관한 법으로 3년 뒤인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됨으로 이 이후에는 일본이 사실상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관된 군사대국화의 길과 애국심 고취 그리고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는 현재의 일본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일본정치가 생각하는 '강한국가'의 모습이고 이제 그 변환의 터닦기 작업을 대체로 끝낸 셈이다.

후쿠다 총리가 아베총리보다 온건하고 아시아를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강한국가 혹은 보통국가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일본정치의 물꼬는 잠시 숨을 죽였을 뿐 방향을 틀지 않았다. 후쿠다 총리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에 가 있다고 하는 오자와이치로 역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본사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격차사회로 치달으며 사회적 통합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2007년의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에 등을 돌린 것은 막연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자민당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역사회에서 피부로 체감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만일 중앙정치의 생리상 일본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격차와 아무리 노동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워킹푸어' 그룹의 증가가 지속된다면 일본정치는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현재의 자민당 정치는 국가개입의 확대가 아니라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각종 국·공영사업의 민영화와 시·군·구의 통폐합 등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후쿠다 총리가 제안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나 FTA를 비롯한 경제협력은 이러한 양국의 비슷한 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을 환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민영화를 통한 시장의 확대와 심화가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사회적 불만을 더욱 고조시킨다면 역설적으로 내셔널리즘과 파시즘의 심리가 작동하게 되고 이것이 헌법개정과 연결되어 강한 국가를 지향하는 국내여론이 일순 불을 지필 수 있는 염려스러운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Ⅲ.

대외적 관점에서 후쿠다정권을 살펴보자. 한일관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고이즈미정권 당시 2002년 북일정상회담과 평양선언 등에 깊이 관여하는 등, 북한문제를 포함한 아시아 외교에 적극적인 인물이라는 점이다. 특히 올해, 북경에서 열리는 올림픽과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G8정상회담, 2010년의 상해엑스포, 2012년 여수박람회, 2012년 중국광저우 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향후 한중일은 문화교류와 경제교류의 호재가 이미 공식행사 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일본사회에 미국 편향적인 외교에서 아시아를 중시하는 외교로 옮겨갈 것을 요구하는 동력이 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일본 서점가의 흐름이나 대학과 연구소에도 이를 반영하듯 '아시아' 는 커다란 화두로 대두하고 있다.

과연 일본이 얼마나 가까이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아시아로 귀환할 것인가. 그동안 일본은 야스쿠니신사 참배 및 역사교과서문제 등으로 한국과 중국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다. 오히려 일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동맹외교를 강화하는 것을 구실로 자국의 군사대국화를 지향해왔고 이제는 헌법자체를 바꿀 기세이다. 최근 중국이 아시아판 유엔을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하이난다오섬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들고 새로운 아시아 정치경제 협력의 중심으로 두는 평화비둘기전략을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이른바 '워싱턴컨센서스' 가 아니라 중국식 철학과 방식이 작동하는 '베이징컨센서스' 를 확립하고 싶은 것이다. 미국이 배후에 있는 유엔이 아니라 중국이 중심이 되는 아시아판 유엔을 구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일관계에도 미묘한 균형이 재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미국의 충복역할을 자임했던 일본이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남과 북의 협력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한반도와 등을 돌리는 관계는 그만큼 미국이 아시아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본이 적절한 수준에서 아시아 주변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일본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한국 사이에 각국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미국과의 친분을 매개로 서로 친하게 지내올 것을 장려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작년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일본이 아시아외교에서 역사적 보편성을 유지할 것을 은연중에 압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이 미일관계와 미국과 아시아관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장기적으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입지를 다져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군사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미사일실험을 지원하는 등 미일군사동맹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미

국은 한국에도 「주변사태법」, 「미사일방어체제(MD)」,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WMD, PSI)」등을 다시 강요하고 한미일간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을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또한 미국식 실용주의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후쿠다 총리가 한국과는 정상간 셔틀외교를 제안할 만큼 한일관계는 가까운 이웃이지만 북일관계는 아주 먼 이웃이다. 한반도에서 남북관계가 아무리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도 일본사회에서는 한반도가 일본식 분단을 심화시켜왔다. 실제로 6자회담의 틀을 전향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미수교보다 북일수교를 진전하고 일본이 전후배상문제를 처리함으로써 북한의 경제개발과 개방을 촉진하고 아시아에 개방된 국가로 안착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6자회담을 중국의 중재와 북미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북미 양자관계를 축으로 해서는 북핵문제는 쉽게 풀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한일관계에서 주목해볼 대목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TCOG등을 통해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조절할 것이지만 한일관계의 활성화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반영한다면 새로운 균형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일관계의 활성화가 북한을 고립시키고 남북관계를 악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정부 이후 한일관계가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대북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이고 중국이 구상하는 아시아질서와는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개입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인지 향후 한일관계에서 주목해볼 대목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를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일본정치와 '기업'을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실용주의노선의 이명박정부 사이에서 관망하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중심에 서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8/02/27)